

정치위기에 허우적대는 박근혜

박근혜의 위기를 기회 삼아 성과연봉제 저지로 나아가자

오늘(9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가스,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부산지하철 노동자 5만 4천여 명이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출범 이래 이렇게 대규모로 동시 파업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노동자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안 그래도 지난 3년간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임금 피크제 도입, 수당 삭감, 복지 축소 등의 공격에 시달려 왔다. 성과연봉제까지 도입되면 더한층 임금이 공격받고, 노동 통제가 심화되고, 노동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공공서비스의 질도 하락될 것이다. 성과연봉제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력한 이유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노동계약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올해 공공·금융 부문에서 관철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려 한다. 지난 23일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에 나서고, 26일 현대차지부가 12년 만에 전면파업을 벌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은 정부의 노동계약에 맞선 노동계 전체 투쟁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 지침으로 이사회 강행 통과를 밀어붙이고, 지금 이 순간 “불법 파업” 비난을 퍼붓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근혜는 24일 장관 워크숍에서 직접 공공운수노조 파업 등을 거론하며 “노동계 연쇄 파업은 국가적 위기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추악한 비리와 부패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야말로 진정한 “불법”, “위기의 장본인이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으며 노동자 쥐어짜기에 앞장섰던 최경환의 불법적 채용 지시 사실도 폭로됐다.

더구나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벌이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려는 범죄다.

레임덕

박근혜는 악랄하고 집요하게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는 결코 강력하지 않다. 최근에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청와대

를 커다란 위기로 몰아 넣은 우병우 게이트가 잠잠해지기도 전에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이 불거졌다. 박근혜의 ‘일해재단’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사건은, 박근혜 자신이 그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우병우 게이트보다 파장이 훨씬 크다.

지진 대처와 원전 위험성 논란도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해당 지역 원전 건설의 위험성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폭로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농림수산축산부 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도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근본적으로 현 상황은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집권당의 깊은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가 보여 주듯 구조조정 속도와 방법 등 경제 위기의 해법을 둘러싸고 지배자들의 내분과 쟁투도 계속될 것이다. 즉 그만큼 지배계급 내 위기가 깊고 날카로워 위기가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만만찮은 경제 위기 때문에 저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서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파업을 지속하고, 파업의 효과를 높여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단호한 투쟁으로 위기의 박근혜를 더한층 몰아붙이면, 다른 부문의 더 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지지와 연대도 확대될 수 있다.

폐기된 구조조정 방안 되살린 서울지하철 ‘혁신’안

서울지하철 사측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성과연봉제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울지하철 혁신 실행과제 검토안’(이하 혁신안)까지 내놓았다.

혁신안은 4조2교대 근무제 폐지와 업무량에 따른 변형 교대제 실시, 기관사 비숙박 제도로 변경, 호선 별 책임제 도입, 기술 분야 직종통합, 역무직 다기능화 등 성과 경쟁과 노동강도 강화 조처

로 가득하다. 이는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사측이 내놓았다가 노조의 거센 반발로 폐기됐던 구조조정안의 재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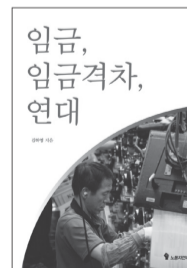
노동 강도 강화

구의역 참사 수습과 지하철 혁신을 위해 박원순 시장이 임명한 김태호 사장의 취임 첫 작품이 이 성과연봉제 추진과 혁신안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박원

순 시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당사자는 아니고 ‘일방 도입 반대’ 입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성과 경쟁을 강요하는 것을 적극 저지하고 나서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성과 경쟁과 노동강도 강화 시도를 더 확실히 막아내려면,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 정부와 사측을 물러서게 만들고 서울시에도 압력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추천 소책자



임금, 임금격차, 연대

김하영 지음, 노동자연대 펴냄
136쪽 4,000원

구입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https://workerssolidarity.org/

성과연봉제는 무엇을 노리는가

효율성·서비스 질·청년 일자리를 위한다는 정부의 거짓말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성과연봉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경제 회복을 발목 잡는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전체 사회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을 낳는 증거도 없다. 경쟁을 강화한다고 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성과주의를 강화할 경우 자포자기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기도 한다.

또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공공부문에서 경쟁 강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킨다. 주된 목표가 서비스 질 개선보다는 비용 절감에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성과주의 강화로 재정지출을 줄였는지도 뚜렷하지 않다. 경제 위기 탓에 공공서비스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연공서열제(호봉제)와 더 많은 재정 지출(세금)이 경제 성장에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연공서열제는 일본의 전후 재건 과정에서 도입되기 시작돼 1960년대에 한국에 도입됐다. 두 나라 모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에 연공서열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낮은 초임을 정당화하는 한편, 숙련 노동력을 붙잡아 두는 효과적인 유인책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초임을 인상하고 인사고과도 부분적으로 약화시켜 임금을 늘려가자 이런 이점은 차츰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성장이 둔화하자 투자 동기가 약화됐고, 인건비(임금) 절감이 '효율성'을 높이는 주된 방식이 됐다.

다른 서구 나라들에서도,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자 가장 먼저 공공부문을 공격했다. 정부는 재정 지출 즉, 공공부문의 비용(재정지출)을 줄여 두 가지 효과를 내려 했다.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기업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 민간 기업에서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억누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아예 민영화해서 기업들

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계급에 대한 지배자들의 계급투쟁이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도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런 조처들이 추진된 지 수십 년이 넘었는데도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위기로 빠져들었다.

경제 위기

그럼에도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려 한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실제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해도, 불황 속 경쟁에서 기업(주)들이 살아남으려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임금체계 개편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약속은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금 같은 불황 속에서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정부의 우선순위는 정반대로 비용(재정-세금) 절감에 있기 때문이다. 재

정 지출을 줄이면서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만든 일자리는 저임금 비정규직(혹은 무기계약직) 일자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최근 조선사들이나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듯, 기업 부실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사주들은 별 책임도 지지 않는다. 대기업 이윤의 일부인 사내유보금만 해도 수백조 원에 이른다. 자본주의와 기업주들이 불러 온 경제 위기에 어떤 노동자들의 임금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가당찮은 억지일 뿐이다.

요컨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은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기업주들의 비용(임금과 세금)을 줄여 주려는 시도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성과주의 강화는 장치 '저성과자 퇴출제' 등 해고를 쉽게 하는 발판 구실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 투쟁은 노동계급 전체를 위한 투쟁이다.

성과연봉제 반대 당론 채택 못한 더민주당

노동운동 내에는 성과연봉제를 저지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일부는 이번 파업으로 국회를 압박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국회 중재로 성과연봉제 시행을 일단 유예시키고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권의 위기를 적극 이용해 단호하게 싸우면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노동자들의 투쟁 잠재력을 극대화하기보다 국회에 더 의존하게 되기 십상이다. 현실에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국회 환노위의 다수인 더민주당·국민의당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일방성'이나 공공성 훼손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이 당은 '성과연봉제 일방 강행 반대' 당론 채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당 내에서 성과연봉제를 지지하는 입장이 주류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성과연봉제 반대를 분명히 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이런 더민주당의 중재에 기대면 기댈수록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압력도 뒤따르기 십상이다. 정부를 압박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파업)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기보다 임금 삭감, 노동조건 악화 반대를 분명히 내걸고 투쟁을 발전시키는 게 효과적이다.

성과연봉제에 관한 주요 정당 입장

	적극 지지
	당론 없음
	노사 자율
	반대



노동자 정치 신문 <http://wspaper.org>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